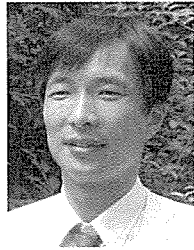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방주의의 법률적 문제점



송기호
변호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맺겠다고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다. 정부의 통상 행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자유무역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할 때, 자유무역협정이란 일부 회원국끼리 상호 간의 무역에서 원칙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실질적으로 모든('substantially all') 무역 거래에 관세가 없어져야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러므로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의할 때, 쌀이나 쇠고기 등 수입 농산물 모두에 대한 관세가 철폐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축산인에게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없애면, 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긴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혜택이 다르게 된다. 이익을 보는 계층도 생기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부터 사회 각층이 참여 하여 의논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측이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마련해 놓았다. (미국의 무역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일방주의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일방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없었다. 대통령 훈령에서 반드시 하도록 한 공청회조차 협상 개시 직전

에 맞추어 졸속으로 잡아 놓았고 그나마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국민 경제에 어떠한 이익과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조차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국내총생산이 2%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측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치에 의하더라도 최저 0.42% 증가에서 최대 1.99% 증가이다. 반대로 우리가 볼 피해 부분을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농업 부분에서만 약 10만 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무역수지 흑자가 매년 약 50억 달러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항이다.

미국 축산 농가의 이익

미국은 통상 협정 체결 전에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무역위원회가 2001년에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향 평가 보고서가 있다. 여기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수출액을 54% 늘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은 농업분야에서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하였다. 바로 미국 쇠고기와 치즈 수출이 60%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 전체 농업생산액이 0.9%나 증가하게 된다. 작년에 미국 쌀 생산량이 5.25%나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얼마나 미국 농업에 큰 이익이 될 것인지 알 수 있다.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쌀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켰을 경우 한국 농업부문의 피해액이 8조원에 달한다.

한국 축산 농가의 피해

권오복 박사(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2004년 농산물 수출에서, 곡물다음으로 수

출이 많은 품목군은 축산물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21%나 된다. 쇠고기 수출액이 31억 달러에서 광우병의 영향으로 5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도 그러하다. 현행 20~25%로 되어 있는 미국산 육류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내릴 경우 미국산 육류가 더 많이 한국에 수입될 것이다. 권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낙농제품이 가장 수입증가율이 높는데, 157%에서 많게는 5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로 인하여 축산부문에서 발생할 실업자는 약 2만 명에서 최대 약 5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의 자국 농업보호정책을 폐지시킬 수 있는가?

미국 농업의 경쟁력은 사실은 미국의 자국 농업 보호 정책의 산물이다. 그래서 DDA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 협상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차원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문제라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를 문제 삼을 의지가 없다. 결국 미국 농업의 보호 정책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한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인가?

이제 협상이 시작인 단계지만,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이익할 지는 낙관할 수 없다. 지금은 수출이 모든 것을 해결하던 시대가 아니다. 작년에 수출이 잘 되었지만 오히려 기업의 고용능력은 감소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우리 경제 구조를 놓고 자유무역협정을 보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일본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수입 유발형 경제 구조이다. 또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공장이 상당히 중국으로 이전되어 있어, 중국 내 수요가 아닌 미국 수출용에는 중국산 원산지로 표시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이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제조업에 주는 도움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내부의 일방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이다. 작년 쌀 협상에서도 그랬지만, 협상 중에는 협상 중이라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협상이 끝나면 국제 신의 문제라면서 협상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통상행정이다. 심지어 작년 쌀 협상에서 쌀 수출국과 체결한 합의문도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3급 비밀 사항으로 분류해 놓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법원은 쌀 협상 합의문을 3급 비밀로 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6. 1. 10. 선고 2005 구합 20467 판결)

통상절차법 제정이후에 추진 검토해야

지금 상황은 소수의 통상관료들이 국가 중대사를 정당한 절차와 민주적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 절차도 미국 통상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비준 동의권한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적어도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그 절차에 맞추어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통상절차법(안)에 따르면, 미리 통상 협상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영향 평가와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협상의 중요 진행 상황을 이해당사자에게 수시로 설명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축산인에게도 당연히 알 권리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있다.

헌법 질서 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재검토할 때이다.